

## “전문가가 바라 본 향후 5년,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 방향”

### I.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가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아울러 향후 5년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함. 정책 부문별 대표지표 및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조사질문지 항목에 기술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높임.

- 조사대상 : 여성정책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 84명
- 조사기간 : 2012.12.6.~12.14.
- 조사항목 :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부문, 각 분야별 세부 정책 우선순위, 정책효과성이 높은 정책 부문에 대한 인식 조사임.

☞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0년부터 발간한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는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해, 8개 정책부문 대표지표를 지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8개 정책 부문은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임.

☞ 성평등지수는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특정 국가의 부문별 수준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함(2011, 여성가족부).<sup>1)</sup>

-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함. 현재 사용하는 '국가 성평등지수' 대표지표는 <부표1>과 같으며, 대표지표가 성평등 수준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확장된 지표를 더 많이 추가할 수 있고,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대표지표의 지수값은 성평등을 위해 방향성을 가지며, 성격차(Gender Gap)를 줄이거나 여성 참여율을 높이거나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값은 '10년 데이터 기준'으로 62.6으로, 이는 완전불평등 '0.0'부터 완전평등 '100.0'의 사이 값으로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음. '10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이고,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으로 보고됨(2011,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부(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대표지표의 지수값이 필요한 경우 본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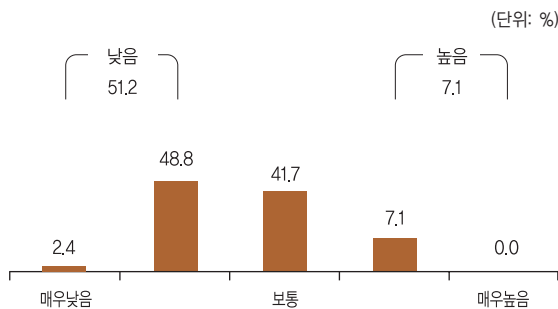
## II. 국가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 이슈 #1

#### 우리나라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 전문가의 51.2%가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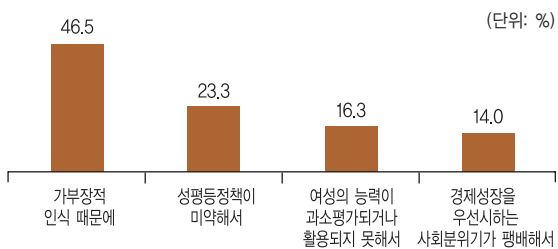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이 어디에 해당하는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매우 낮음' 2.4%, '낮은 편' 48.8%, '보통' 41.7%, '높은 편' 7.1%로 나타남. 5점 척도 기준 평균값은 2.54로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전반적 성평등 수준

##### ☞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이유는 46.5%가 '가부장적 인식 때문'이라고 응답함

-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이유는 '가부장적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46.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성평등 정책이 미약해서' 23.3%, '여성의 능력이 과소평가되거나 활용되지 못해서' 16.3%,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서' 14.0%임.



〈그림 2〉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이유(n=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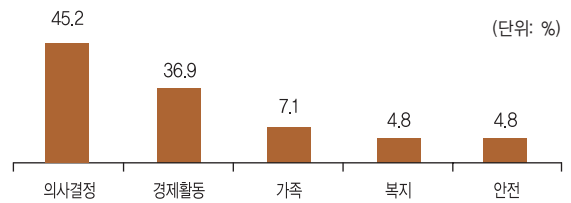
- 성평등 수준이 근본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의식이 변화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슈 #2

#### 정책 부문에 대한 성평등 수준 인식

##### ☞ 국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다고 인식되는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임

-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45.2%가 '의사결정'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은 '경제활동' 36.9%, '가족' 7.1% 등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의사결정 부문에서 낮다는 인식은 절반 가까이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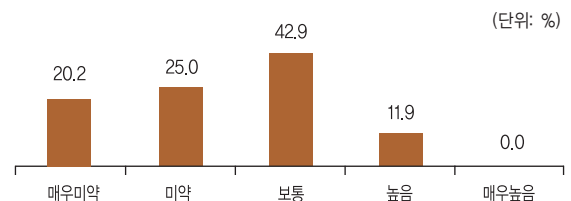
〈그림 3〉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정책부문

### 이슈 #3

#### 차기정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성평등 수준 제고에 대한 기대

##### ☞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sup>2)</sup>의 성평등 공약 제시 수준에 대해서는 54.8%가 보통이상으로 답함

-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성평등 공약 제시 수준에 대해서는 '높음' 11.9% '보통' 42.9%로 보통이상이 54.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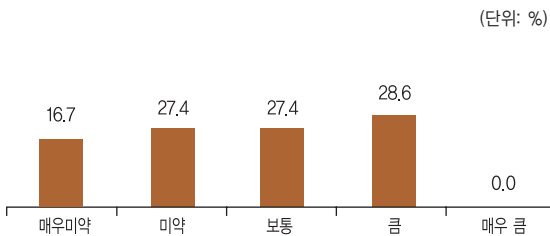


〈그림 4〉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성평등 정책 공약 제시수준

2) 조사기간(2012. 12. 6.~12. 14.)을 기준으로 함.

#### ▣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국가 성평등 진전에 주는 기대는 56%가 보통 이상임

-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국가 성평등 진전에 주는 기대는 '큼' 28.6%, '보통' 27.4%로 보통 이상이 56%임.



〈그림 5〉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국가 성평등 진전에 주는 기대

- 전문가의 성별을 구분하여 보면, 여성응답자는 '정책당국과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다소 높고, 남성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1〉 향후 5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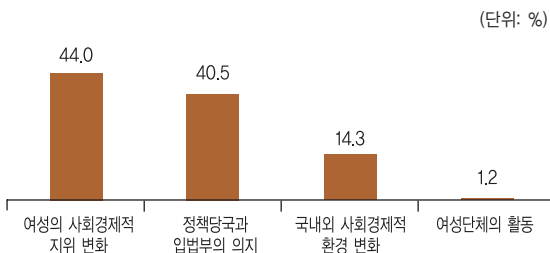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정책당국과 입법부의 의지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여성단체의 활동
전체		84	44.0	40.5	14.3	1.2
성별	남성	22	50.0	31.8	18.2	0.0
	여성	62	41.9	43.5	12.9	1.6

#### 이슈 #4

#### 향후 5년, 국가 성평등 수준 영향 요인

#### ▣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변화', 와 '정책당국과 입법부의 의지'는 국가 성평등 수준 결정에 중요할 것임

- 향후 5년 이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라는 응답률이 44.0%, '정책당국과 입법부의 의지'의 응답률이 40.5%,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14.3%임.



〈그림 6〉 향후 5년 이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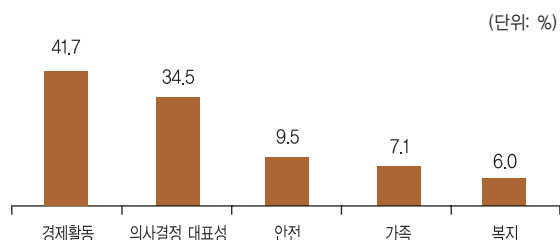
### Ⅲ.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이슈 #5

#### 향후 5년, 성불평등 해소 정책 우선순위

#### ▣ 성불평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정책 부문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은 '경제활동' 부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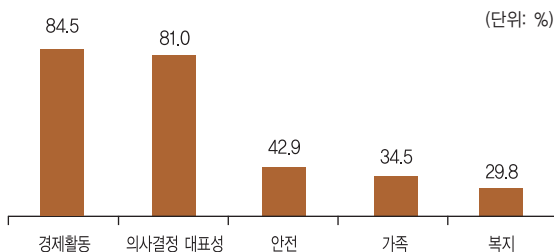
- 국가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대표지표를 부문별로 제시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공유한 후에 성불평등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 부문을 표시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표시된 정책 부문은 '경제활동'으로 41.7%를 차지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대표성'이 34.5%로 나타남.



〈그림 7〉 성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정책부문 1순위

## ☞ 차기 정부 성불평등 해소 정책 우선순위(3순위 내)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대표성', '안전' 임

- 8개 정책부문의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1, 2, 3순위를 표시한 결과, 3순위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정책 부문(중복응답)은 '경제활동' 84.5%, '의사결정 대표성' 81.0%, '안전' 42.9%, '가족' 34.5%, '복지' 29.8% 순으로 나타남. 현재,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인식하는 부문을 차기정부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경제활동' 부문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임금 격차, 상용근로자의 성비와 '의사결정' 부문의 국회의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그리고 '안전' 부문의 범죄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임.



〈그림 8〉 성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정책부문(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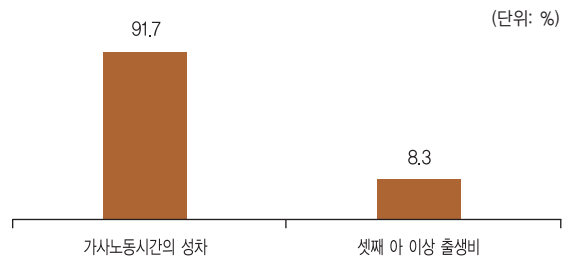
## 이슈 #6

### 정책 부문별 격차 해소 우선순위

## ☞ 가족정책 부문은 '가사노동시간'의 성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함

- 가족정책 부문의 대표지표는 '가사노동시간의 성차', '셋째 아 이상 출생 성차'의 두 개 지표가 있음. 최근 자료에 의하면(200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여성 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41분, 남성 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 4분이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여성취업자의 경우 2시간 34분, 남성취업자의 경우 36분으로 성간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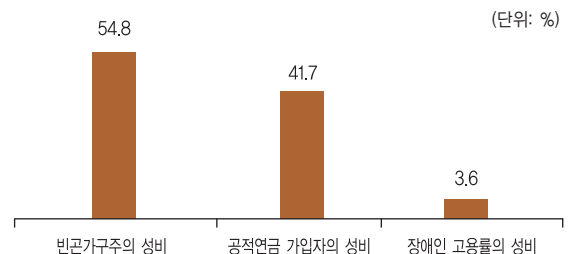
- 셋째아 이상 출생 성차는 '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아 100명당 남아 110.9명으로 남아가 다소 많이 태어나는 정도임.
- 가족 정책 부문에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가사노동시간이 동등한 수준으로 변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인식을 볼 수 있음.



〈그림 9〉 가족정책 부문 중 우선적 해결

## ☞ 복지정책 부문 성불평등의 우선적 해결은 '빈곤 가구주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음

- 복지정책 부문 대표지표는 빈곤가구주의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임. 세 개의 대표지표 중 우선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표를 선택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은 '빈곤가구주의 성비'로 54.8%임. 그 다음이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로 41.7%임. 여성가구주의 빈곤화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그림 10〉 복지정책 부문 중 우선적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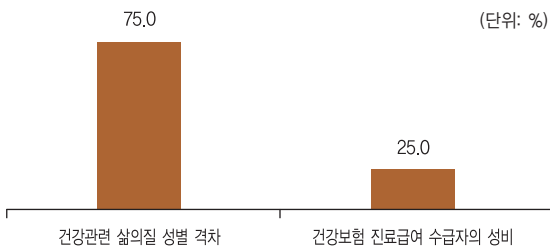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여성가구주를 말하는 것으로 '09년 24.3%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은 9.1%로 성간 차이를 보임(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는 '09년 기준 공적연금 가입자 수는 여성 약 555만, 남성 약 932만으로 차이를 보임. 공적연금가입자 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합한 수입(연금관리기관별 통계연보).

-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08년 현재 여성 23.7%, 남성 47.6%로 보고됨(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 ☞ 보건정책 부문은 '건강관련 삶의질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둬

- 보건정책 부문 대표지표로는 현재 건강관련 삶의질 지표(건강관련 삶의질 5가지 차원으로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 불편감, 불안과 우울)와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로 성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음. 이 중 어떤 지표가 우선적 해결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조사응답자의 75.0%가 '건강관련 삶의질' 지표의 성격차 해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
- 건강관련 삶의질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고연령층에서 건강관련 삶의질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관리를 필요로 함.



〈그림 11〉 보건정책 부문 중 우선적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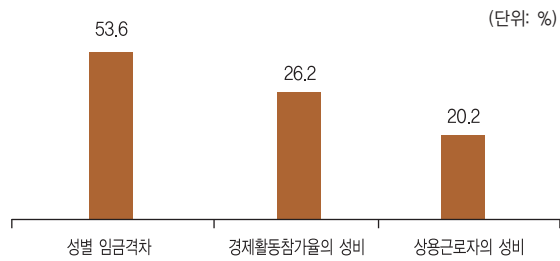
- 병원 입원 진료건수 및 입원급여지급건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높은 상태로 여성의 건강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경제활동 정책 부문의 우선적 해결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경제활동 정책부문 대표지표 중 우선적 해결이 필요 하다고 보는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로 53.6%응답률이 나타남. 그 다음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불평등 해소 26.2%임.
- 성별 임금격차는 '10년 기준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63.9%로 보고됨. 임금근로자의 남녀 평균 차이로 여성의 낮은 임금직종, 하위직급 편중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임.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매년 보고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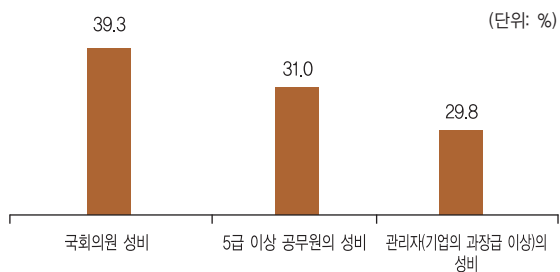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은 '10년 기준 여성이 49.3%, 남성이 73.0%로 차이를 보임. 상용직에서의 여성비율은 33.9%로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는 낮은 상태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회원국 평균 61.8%(2011년도)에 미치지 못함.



〈그림 12〉 경제활동정책 부문 중 우선적 해결

#### ☞ 의사결정 정책 부문은 '국회의원 성비'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둬

- 의사결정 정책 부문의 우선적 해결과제에 대한 응답률은 '국회의원의 성비' 39.3%, '5급이상 공무원의 성비' 31.0%,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29.8%로 나타나, 조사응답자의 의견은 3개 지표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은 고르게 분산되어 나타남. 국회의원 성비의 우선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타 항목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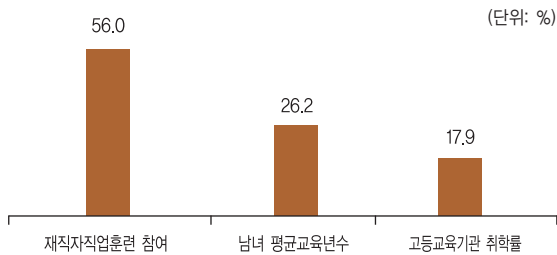
〈그림 13〉 의사결정 대표성 정책부문 중 우선적 해결

- 국회의원 성비는 '08년도 18대 총선 시에 13.7%를 차지하던 것에서 '12년의 19대 총선 결과 15.7%가 되었지만, 아직도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대표성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음.
-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도 '10년 기준 9.0%로 매우 낮은 대표성을 보임. 기업의 관리자 비율은 '10년 기준 500인 이상 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15.1%로 보고됨(고용노동부).

#### ☞ 교육·직업훈련 정책부문에서는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의 여성 수를 늘리는 것임

- 교육·직업훈련 정책부문의 대표지표는 '남녀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재직자직업훈련 참여'의 3개임. 현재 성별 격차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지표로는 재직자직업훈련 참여율로 전체 참여 인원의 30%내외로 보고됨(고용노동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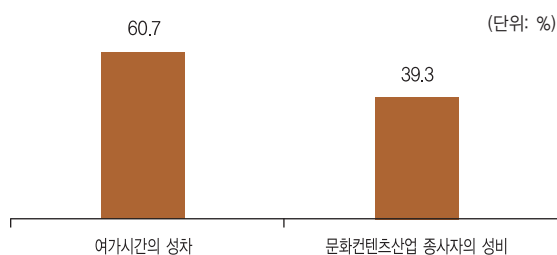


〈그림 14〉 교육 직업훈련·정책부문 중 우선적 해결

- 전체 인구 중 남녀의 평균교육연수는 '10년 여성 10.9년, 남성 12.4년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성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우선적 해결과제에서는 후 순위로 선택을 하였음.

#### ☞ 문화·정보 정책부문의 우선적 해결과제는 '여가시간' 성불평등 해소로 나타남

- 문화·정보 정책부문의 성불평등 해소의 우선적 관심은 '여가 시간의 성차' 문제 해결에 두기를 희망함. 조사 응답자의 60.7%가 '여가시간의 성차'에 응답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피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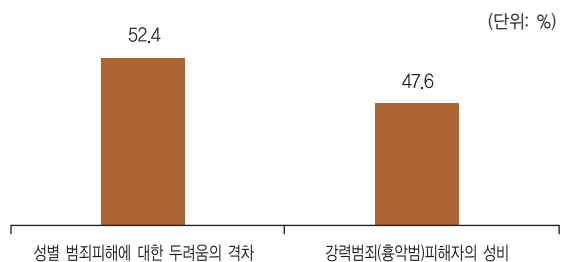


〈그림 15〉 문화정보 정책부문 중 우선적 해결

- 여가시간은 '09년 기준 미취업자의 경우 여성 6시간 3분, 남성 8시간 23분이며, 취업자의 경우 여성 3시간 23분, 남성 4시간 11분으로 성차를 드러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는 종사자 전체 중 여성비율은 41.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 ☞ 안전 정책부문은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강력범죄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동일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안전 정책부문 우선순위는 대표지표 둘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격차'에 52.4%,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에 47.6%의 응답률이 나타남. 두 개의 대표지표 모두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함.
-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남성보다 높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비율은 70%를 넘고 있음.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림 16〉 안전 정책부문 중 우선적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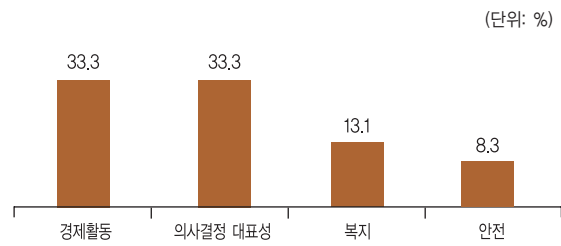
### 이슈 #7

#### 국가 성평등 수준 정책 효과성 제고 방향

#### ☞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의 여성대표성에 우선적 예산 투입이 성평등 효과성을 높일 것임

-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성평등 정책 효과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정책부문으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대표성'에 각각 33.3%의 응답률이 나타남. 대표 지표 지수값의 개선을 통해 국가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경제활동'의 성별 격차 해소와 '의사결정 대표성'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성별임금격차해소, 상용근로자의 여성비율 증가를 위해 우선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의사결정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도 예산을 할당하여 추진 의지를 집행력과 연결한다면, 국가 성평등 수준은 큰 진전이 있을 것임.



〈그림 17〉 동일한 예산 투입 시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정책





〈부표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부문(지표 수)	연번	부문별 대표지표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1.가족(2개)	1-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여성가족부
	1-2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2.복지(3개)	2-1	빈곤가구주의 성비	보건복지부
	2-2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2-3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3.보건(2개)	3-1	건강관련 삶의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3-2	건강보험 입원급여수급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4.경제활동(3개)	4-1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	고용노동부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고용노동부
	4-3	상용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5.의사결정(3개)	5-1	국회의원의 성비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5-3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고용노동부
6.교육 · 직업훈련(3개)	6-1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7.문화 · 정보(2개)	7-1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7-2	문화컨텐츠산업종사자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8.안전(2개)	8-1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법무부 · 경찰청
	8-2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의 성비	법무부 · 경찰청

주 : 여성가족부(2011), 「2011 국가성평등보고서」, p. 38.